



## 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국토교통부	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과장 이동훈, 서기관 이경수 (044-200-2056, 2057)
	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	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	과장 한동희, 사무관 김정훈 (044-200-2911, 2437)
	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과장 이화원, 사무관 정진호 (044-200-2290, 2292)
		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	과장 백형기, 사무관 김혜지 (044-202-3270, 3242)
	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과장 김기용, 서기관 공경화 (044-200-2235, 2236)
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		과장 김태경, 사무관 황병철 (044-201-3469, 3474)	

##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,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

### <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>

- ▶ 지역산업·서민경제·주민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 발굴
- ▶ 발굴 사례를 모델 삼아 쏠 지자체에 확산·적용 (표준조례안 마련·배포)

### <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>

- ▶ 노인맞춤돌봄, 정신건강관리,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예산에 반영('20년 9.6만개 일자리 확대)

### <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>

- ▶ 지하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'23년까지 구축
- ▶ 유관기관 책임성 강화, R&D 추진 및 표준품질 관리로 정확도 개선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9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
-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」, 「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」, 「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」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

\* (참석) 국무총리(주재), 기재부·교육부·과기부·문체부·행안부·산업부·농식품부·복지부·고용부·여가부·국토부·중기부 장관, 국조실장, 통계청 청장, 법제처 차장, 세종특별자치시장, 수원시장 등

### ◆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안 (관계부처 합동)

- 그동안 정부는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.
-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에 이어 금년 들어 두 번째로, 앞으로 4회에 걸쳐 신산업·민생 분야 ‘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’를 하게 된 것이며,
- 이번 전환 방안이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.

구분	안건명(잠정)
1 차	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
2 차	중소기업·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
3 차	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
4 차	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추진방안

## 1. 추진 배경

-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(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, '17.9월)하고,
- 입법방식 유연화<sup>①</sup>와 규제 샌드박스<sup>②</sup>를 통해 신제품·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.

\* ① 개별규제법령 235건 발굴·개선 ②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 승인 (9.19 현재)



○ 또한, 지난 7월 17일 '행정규제기본법'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.

\*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규제 점검·전환 뿐만 아니라, 신설규제에 대해서도 법령 제·개정시 **입법단계에서부터 '유연한 입법방식'**을 적용하여야 함

□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을 대상으로 3차례 '유연한 입법방식'으로 전환한 데 이어,

< 1~3차 상위 법령 전환 >

- ◇ (1차) △금융 △바이오 △자동차·선박 △ICT 분야 등 38건 과제 개선 ('18.1월)
- ◇ (2차) △신소재 △스마트공장 △신 의료기기 분야 등 65건 과제 개선 ('18.10월)
- ◇ (3차) △시장 △기업 △정부 3대 영역에서 132건 과제 개선 ('19.4월)

○ 이번에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,

○ 자치법규의 특성\*을 반영하여 이번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△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△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△ 주민 복지 여건을 확충하고자 합니다.

\*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주로 지역산업 진흥,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·육성 업무(자치사무)를 직접 규정 (지방자치법 제9조: 지자체 사무범위)

## 2. 특징 및 의미

□ 이번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,

- ①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으며,
- ②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고,

③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,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입니다.

※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의 특징

	<b>중앙부처 법령</b> 1~3차		<b>지자체 자치법규</b> 4차
<b>[대상 분야]</b>	신산업 분야 중심	→	신산업 + <b>민생</b> 분야
<b>[발굴 방식]</b>	중앙부처 주도	→	<b>지자체</b> + 중앙부처 협업 (사례발굴) (검토·대안제시)
<b>[후속 조치]</b>	1사례 1법령 개정	→	<b>1사례</b> → 他 <b>지자체 확산 모델</b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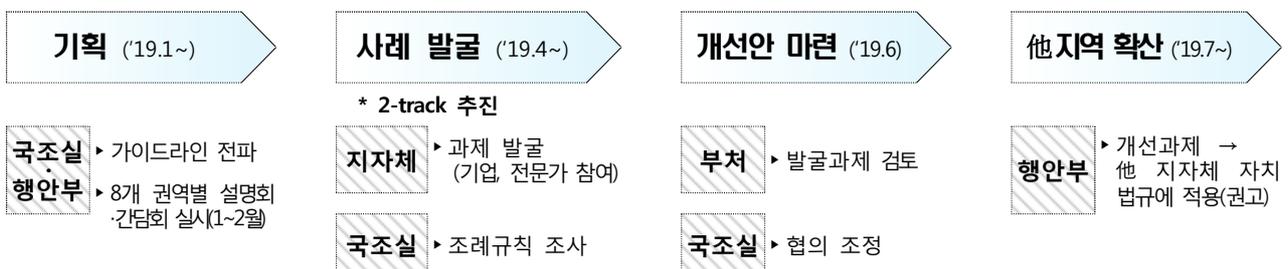
□ 이번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'유연한 입법방식'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

- 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·전문가,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.
- ②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·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.

### 3. 추진 경과

- 지난 1월부터 국조실·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,
- 중앙부처-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에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
※ 추진 경과 개요도



## 4. 전환내용 종합

□ 금번 전환방안에서는 ①지역 산업, ②서민 경제, ③주민 생활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습니다.

### ① '지역 산업' 영역과 관련하여,

-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·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습니다.
-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,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② '서민 경제' 영역과 관련하여,

-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△농·어민 △중소기업·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습니다.
- 이를 통해 농·수산물 생산·판매가 촉진되고,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③ '주민 생활' 영역에서는,

- 주민 생활과 밀접한 △복지 서비스 및 △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.
-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, 주민 안전·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3대 영역별 개선내용 종합

지역 산업 (46)	신산업 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</li><li>▶ 신산업 지원 강화</li></ul>
	기존산업 (3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시장 진입장벽 해소</li><li>▶ 지원 대상·범위 확대</li></ul>

서민 경제 [47]	농·어민 [19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농·수산물 생산·판매 촉진</li> <li>▶ 농·어촌 교육·홍보 및 컨설팅 지원</li> </ul>
	중소기업·소상공인 [28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영업활동 제약 완화</li> <li>▶ 자금융자 및 보조금 지원 확대</li> </ul>
주민 생활 [49]	복지 서비스 [30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</li> <li>▶ 보편적 복지 서비스 강화</li> </ul>
	공공 인프라 [19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안전·편의시설 확충</li> <li>▶ 공공시설 위탁기관 확대</li> </ul>

## 5. 향후 계획

### < 자치법규 전환 후속조치 >

- 먼저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·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.

\* 예)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관련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타 지자체 확산

-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※ 142개 과제 중 18건 과제는 금번 전환 작업 과정에서 개정까지 완료

- 또한,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(7.17)된 만큼 앞으로 조례·규칙을 제·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

\* 자치법규 규제·법제심사 공동지침 마련·배포(8.9 행안부) → 지자체별 「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(규제영향분석서)」 개정 예정

### <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확산 및 보완 >

-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- 기업활동·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·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,
  -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\*를 선정하여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것입니다.
- \* 신산업(전파규제체계, SW제도혁신, 신제품인증 등) 중소기업(건강기능식품, 수출입 통관), 영세업장(공중위생영업, 연근해 어업) 등
- 또한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(기재부) 및 부처 평가(국조실)에 반영하여 이행력도 높이겠습니다.
- 아울러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,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·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
- \* 개정·시행 1년이 지나고 신시장·사업 창출, 기업부담 경감 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견 청취, 사례 분석

## 6. 대표 사례 (총 142건)

-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(142건)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〈붙임2 :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네거티브 규제전환 대표사례 상세내용〉

### 1. 지역 산업 기반 강화 : 46건

#### ① 신산업 (15건)

-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·신산업 지원대상을 유연화하여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.

### **【부산광역시】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**

-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,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되어 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 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.
- 이번에 금융관련 서비스업 개념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연계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**【강원도 삼척시】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**

- 삼척시는 그간 지원대상 범위를 '전기자동차'에 한정함으로써 최근 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습니다.
- 이번에 '전기자동차'를 '환경친화적 자동차'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 명도 개정하여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.
- 삼척시는 현재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있고, 금년 중으로 50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지역 내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### **【광주광역시】 광[光]산업 개념 확대 및 육성 범위 확대**

- 광(光)산업의 개념을 광소재, 광학기기, 광통신 등 빛과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전통적인 6가지 제품(분야)로 한정하였습니다.
- 이로 인해 IoT 등 4차산업 혁명기술을 접목한 의료바이오, 에너지,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지원이 어려웠습니다.

- 이번에 '광산업'을 '광융합산업'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합니다.
- 이렇게 된다면 광산업과 융합된 다양한 산업도 광주시의 광산업 집적화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광융합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② 기존 산업 (31건)

-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핵심 산업을 활성화합니다.

### **【전라남도 담양군】 전통 한옥 개념 확대**

- 기존에 구조·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한옥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만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.
- 담양군의 이번 조치로 한옥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지역 중소 건축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.

### **【제주특별자치도】 로컬푸드 범위 확대**

-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'한라봉 티', '알로에 즙'과 같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지 못했습니다.
-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'로컬푸드'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합니다.
- 이렇게 된다면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하여 지역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2. 서민 경제 활동 촉진 : 47건

### ① 농·어민 (19건)

- 농·수산물 생산·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농·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.

#### **【경기도 김포시】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**

- 김포시가 관리하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하여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가 불가능했습니다.
- 이번에 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임대가 허용됩니다.
- 이를 통해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김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.

### ② 중소기업·소상공인 (28건)

-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사업자의 활력을 촉진합니다.

#### **【충청북도 진천군】 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**

- 진천군은 현재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하고 있는데, 이로 인해 비제조업 분야나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업종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- 이번에 사행산업 등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.
- 이를 통해 앞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관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.

### 3. 주민 생활 편의 증진 : 49건

#### ① 복지 서비스 (30건)

-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.

#### **【경기도 포천시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**

-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택시 등과 같은 특별 교통수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,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상위법인 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’에서는 임산부, 영유아 동반자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,
- 포천시도 이와 동일하게 ‘교통약자’의 개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이러한 조치를 통해,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역 내 교통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.

#### ② 공공 인프라 (19건)

-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 이용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.

#### **【경기도 의정부시】 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**

- 현재 공원시설을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,
-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할 경우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기관을 확대합니다.
-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으로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내 물적·인적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 ◆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 (관계부처 합동)

□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「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」을 논의했습니다.

-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분야\*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.

\* '15년 고용유발계수(10억원 당 명, 한국은행('19)) : 평균 8.0, 사회서비스 12.9

□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① 추진경과 및 성과

- 정부는 지난 '17년 국정과제로 '22년까지 “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” 목표를 발표한 후, 작년 말까지 일자리를 5.6만개 확대하였으며, 올해는 9.5만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있습니다.

\*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 주요 일자리 성과 ('17~'19.7)

-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5.8천명,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4.1천명
-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4천명, 간호간병서비스인력 6.5천명
- 장애인 활동지원사 13천명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인력 0.9천명

###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

- 돌봄 서비스 외에도 보건의료, 문화, 취업지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, '20년 예산안에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9.6만개를 반영하였습니다.
- 또한, 신규 일자리 발굴,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조정 등을 반영하여 '22년까지 국정과제 “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”을 더욱 공고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.
- '20년에 확대되는 주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.

주요 영역	세부 일자리 예시
<b>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틈새 없는 돌봄망 구축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인맞춤돌봄서비스: ('19) 11,800 → ('20) 29,891개(+18,091개)</li> <li>- 온종일 돌봄: ('19) 1,916 → ('20) 3,534개 (+1,618개)</li> <li>- 아이돌봄서비스: ('19) 29,878 → ('20) 33,878개(+4,000개)</li> <li>- 장애인활동지원사: ('19) 70,435 → ('20) 78,261개(+7,826개)</li> </ul> </li> </ul>
<b>보건·의료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평생 건강 욕구 충족 및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간호간병통합서비스: ('19) 12,312 → ('20) 18,112개(+5,800개)</li> <li>-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: ('20) 204개(신규)</li> </ul> </li> </ul>
<b>문화·여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국민 전반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서비스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: ('20) 247개(신규)</li> <li>-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: ('19) 800 → ('20) 1,000개(+200개)</li> <li>- 공공도서관 야간개방: ('19) 1,313 → ('20) 1,446개(+133개)</li> </ul> </li> </ul>
<b>취업지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고용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: ('19) 20,000 → ('20) 37,000개(+17,000개)</li> <li>-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: ('19) 2,500 → ('20) 5,000개(+2,500개)</li> <li>- 장애인근로지원인: ('19) 3,000 → ('20) 5,000개(+2,000개)</li> </ul> </li> </ul>
<b>안전·환경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안전·환경 서비스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: ('20) 1,000개(신규)</li> <li>- 어린이급식 안전관리: ('19) 1,745 → ('20) 1,799개(+54개)</li> <li>- 고위험업종 안전지킴이(건설현장): ('20) 50개(신규)</li> </ul> </li> </ul>

### ③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

- 시설 종사자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·휴게시간 확보 등을 위해 '20년도 사회복지시설 교대인력을 3천여명 증원하였습니다.
  -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1만2천명, 대체교사 700명을 충원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했습니다.
- 아울러,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단가(3.0% ↑)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(4.8% ↑)를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보수수준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-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,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.

## ◆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

□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잇따른 지하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하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「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」을 논의했습니다.

□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지하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, 구축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.

○ (정보 구축)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상·하수도, 가스 등 6대 지하 시설물의 통합DB 구축(2D)을 '22년까지 완료하고, 이를 기반으로 15종\*의 지하시설물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(3D)를 '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.

\* (지하시설물 6종) 상·하수도·가스·열수송·통신·전력, (지하구조물 6종) 공동구·지하철·지하보도·차도·상가·주차장, (지반 3종) 시추·관정·지질 등

- 지하시설물이 밀집한 시(市)급 지자체(85개)는 내년까지 통합지도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.

○ (대상 확대)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구, 전력구, 송유관, 민간 시추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.

②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○ (유관기관 책임성 강화)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게 지하시설물도(圖) 작성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, 정확도 개선계획을 마련·시행해 개선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- 정부부처는 소속 관리기관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을 지도·감독하도록 하고,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자금·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측은 해당 시설물이 노출되는 굴착공사 시에 유일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, 시설물 관리기관이 굴착공사를 실시할 경우 노출되는 주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측량하여 확인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※ 유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「지하안전법」 개정 추진('19.12~)

- (정확도 개선 시범사업)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었거나 다수 시설 물이 중복매설되는 등 우선적으로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현장굴착 등을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( '20~)

- 이를 통해 개별 시설물별로 위치 정확도를 확인하고 개선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안하여 오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.

- (R&D 추진, 표준·품질 관리) 측량·탐사 기술과 관련한 R&D를 추진( '20~ '23)하여 오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지하매설물 특징에 맞게 측량·탐사 장비와 기술을 적용\*해 나가겠습니다.

\* 심도, 재질(금속/비금속), 액체포함 등 시설물 특징에 따라 탐사 가능성 및 오류율 격차

- 다양한 지하시설물 DB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DB 표준화 방안을 '20년까지 마련하고, 유관기관별 DB와 시스템에 대해 품질 관리와 성과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.

- (협업체 운영) 국토부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\*를 구성·운영('19.11~)하여 정확도 개선물량, 우선순위, 비용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·확정할 계획입니다.

\* 소관부처(과기부, 산업부, 환경부, 소방청 등), 지자체, 관리기관(가스·난방공사, 한전, KT 등),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등

- 협업체에는 정부 소관부처 이외에 민간 관리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③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하겠습니다.

- (활용대상 확대)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에 제한적으로 활용\*되고 있으나,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하개발사업과 굴착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(「지하안전법」 개정 추진, '19.12 ~)

\* 공익·안전과 밀접한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되어 제한적 공개,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10m 이상 지하굴착 포함 사업 시행시,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당 공공사업자 및 지자체에 한하여 정보제공

-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이를 통해 GTX, 지하고속도로,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지하개발사업에 3D 지하정보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(제공절차 간소화) 현재 ‘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센터’ (한국건설기술연구원)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를 신청·수령·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에서 파기까지 전 단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\*할 계획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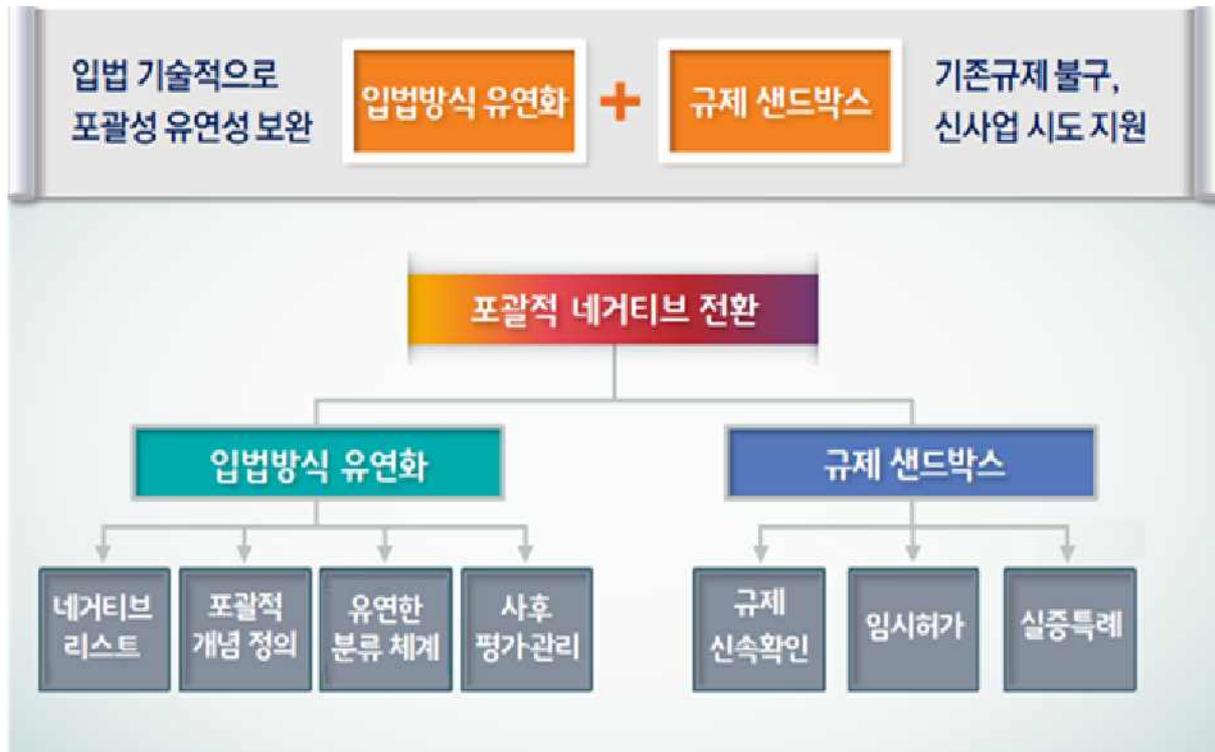
\* ('19) 현재 15개 시(市) 시스템 연계 완료, 경기도내 10개 시(市) 추가 연계 → ('20~) 60개 시(市) → ('21~) 77개 군(郡)

## 붙임 1

#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

- **(개념)** 기술융합·빠른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필요

→ 신제품·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'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' 하는 방식으로, △입법방식 유연화, △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핵심



- **(입법방식 유연화)** 네 가지 입법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구현

- ① **(네거티브 리스트)**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 허용
- ② **(포괄적 개념정의)** 인·허가 및 지원대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
- ③ **(유연한 분류체계)** 新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신설
- ④ **(사후 평가·관리)** 사전심의 의무 면제 → 자율심의, 사후평가·관리

- **(규제 샌드박스)**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 신산업 시도 허용

-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 존재 여부·내용을 문의하고, 임시허가로 조기에 시장 출시하거나 실증 특례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

**1 지역 산업 기반 강화**

**1-1. [신산업]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기술·신산업 지원 대상을 유연화  
→ 신기술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신산업 기반 확장 (15건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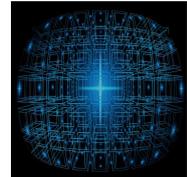
**◆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유연한 분류체계**

「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

**기존** 금융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, 회계, 세무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 → 최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벤처업체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 곤란

**개선**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념 확대  
\*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

**효과**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(7.23)과 맞물려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다양한 서비스기업 지원을 통한 연계산업 시너지 효과 제고  
\* 부산 블록체인 관련기업 250개사, 830억원의 시장규모 및 15,353명 일자리 창출 기대 ('23년 기준)



**◆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 포괄적 개념정의**

「삼척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」

**기존** 지원대상을 '전기자동차'에 한정 → 최근 각광받는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 불가

**개선** '전기자동차'를 '환경친화적 자동차'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

**효과** 전기차 외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역산업 활성화  
\* 삼척시는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고 금년 중 수소차 50대 보급 예정 → 최근에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('19, 산업부) 선정으로 수소가스를 삼척시 내 자체 생산·공급 계획



**◆ 광[光]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 확대 포괄적 개념정의**

「광주광역시 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」

**기존** 광산업의 개념을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첨단 생산·판매 제품(6종)으로 한정 \* 광통신, 광정보기기, 광정밀기기 등  
→ 의료바이오, 에너지, 환경, 조선·자동차,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 창출·지원 불가

**개선** '광산업'을 '광융합산업'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칭도 개정

**효과** 광주 광산업단지 → 광융합산업 집적화단지로 개편되어 입주대상 기업 확대  
\* 산업부에서 마련 중인 '광융합기술종합발전계획'과 연계하여 국내외 인증 확대, 해외시장 진출 도모



## ①-2. [기존 산업] 시장 진입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 확대 → 지역 핵심산업 활성화 (31건)

### ◆ 전통 한옥 개념 확대 네거티브 리스트

「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」



**기존** 한옥 개념을 구조·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·기준을 엄격하게 규정\* → 최근 새로운 형태의 개량한옥 건축물 시장 진입 애로

\* 주요부가 목구조로써 흙, 황토벽돌(블록), 한식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물

**개선** 한옥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개념요소\*만을 규정하고 이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 허용

\* 기둥·보, 한식 지붕틀로 된 전통양식을 반영한 목구조

**효과** 개량 한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중소 건축업 활성화

\* 최근 담양군 한옥건축 지원 대상은 7동(16년) → 4동(17년) → 1동(19년 상)으로 감소 추세  
한옥건축 지원 대상이 3동 증가한다면 지역내총생산 15억원 증가 예상(건축비 3억 + 연관 사업 2억)

### ◆ 로컬푸드 범위 확대 포괄적 개념정의

「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

**기존** 로컬푸드로 인증을 받는 품목이 농수산물로 한정\* → 최근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생산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인증에서 제외

\* 품질 인증 효과와 더불어 로컬푸드 직매장 내 판매 가능

\*\* 채소, 과일, 육류, 어류 등

**개선**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개념 확대

**효과** 한라봉 티, 알로에 즙 등 다양한 유기농 식품이 새로운 판로 확보  
→ 제주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활성화

\*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'19년 현재 200여 곳, '22년까지 1100여 곳으로 확대 계획

### ◆ 지역건설산업 개념 확대 포괄적 개념정의

「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」



**기존**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'건설산업기본법'에 의한 건설업, 건설용역업으로 한정 → 실제 지역단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업(전기·통신·소방), 자재 제조·유통업 등은 제외

**개선**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공사업, 건설자재 제조·유통업 등 다양한 건설업 연관산업이 포섭될 수 있도록 확대

**효과**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 지원 및 연관산업 활성화

\*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'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'과 연계하여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

## 2 서민 경제 활동 촉진

### 2-1. [농·어민] 농수산물 생산·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→ 농·어촌 경제 활성화 (19건)

#### ◆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 네거티브 리스트

「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」

**기존** 임차인 자격을 김포시에 주민등록된 주민으로 한정  
→ 김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(부천, 인천)에 거주할 경우는 임대 불가

**개선**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두 농업인(농지원부·임대차계약서로 증명)에게 임대 허용 (주민등록 제한 규정 삭제)

**효과**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김포시 소재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 
\* 부천·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근 농민 100여명 혜택



#### ◆ 농민 직영매장 설치 자격 범위 확대 네거티브 리스트

「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

**기존** 농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을 '5년 이상 거주자'로 한정  
→ 최근 증가하는 신규 귀농인 및 타지역 거주자의 참여곤란

**개선** 농·임·축산물 생산자라면 거주기간·지역에 상관없이 직영매장 설치 허용 (거주 기간·지역 제한 규정 삭제)

**효과** 양주·포천·의정부 등 주변 지역 농민,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민에게도 농산물 직판매의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



### 2-2. [중소기업·소상공인]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→ 지역 사업자 활력 촉진 (28건)

#### ◆ 유망 중소기업 대상업종 선정 합리화 네거티브 리스트

「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」

**기존**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을 '제조업·제조업 관련 서비스업'에 한정  
→ 非제조업 분야(기술벤처업 등) 및 업종간 융복합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다양한 업종이 제외되는 불합리 초래

\* 해외 홍보 우선참여, 주요행사 초청 및 행·재정적 지원

**개선** 사행산업, 유흥·향락업 등 금지 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 허용

**효과** 제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업종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



### ◆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범위 확대 유연한 분류체계



「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」

**기존** 지원 범위가 '정보 제공' 및 '컨설팅' 등 간접적 지원으로 한정

\*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정보 제공, 전문가 컨설팅, 창업 정보 제공 등 3종

→ 지역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, 판로 확보 등 핵심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된 지원에 애로

**개선**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, 사업화 지원, 공공구매, 홍보·마케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유연화

**효과** 지역 내 신기술 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\* 수원산업단지(델타 플렉스) 내 IT, BT 등 700여개 기업, 광교테크노밸리의 200여개 첨단기업 지원

## 3 주민 생활 편의 증진

### 3-1. [복지 서비스]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(30건)

#### ◆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 확대 포괄적 개념정의

「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

**기존** 특별교통수단(휠체어 등이 부착된 승합 택시, 일반택시비보다 저렴)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가 장애인·고령자 중심으로 한정\*

\* 1~2급 장애인, 65세 이상, 지체장애인 3급 등

→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의 신청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에서 제외되어 이용 불가

**개선** 상위법령인 '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'상의 '교통약자' 개념으로 확대

\*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등

**효과** 지역 복지수준을 정부 시책 수준으로 향상하여 지역내 교통 복지서비스 확대 및 교통약자 편의 증대



#### ◆ 도서관 회원 자격조건 완화 네거티브 리스트

「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**기존** 도서관 회원자격을 경기도민 또는 직장·학교의 소재지가 경기도민자로 한정 → 인근 서울 북부지역 거주자 이용 불편 제기

**개선** 금지대상(부적격자\*)을 열거하고 그 외 누구나 도서관 회원 가입 가능

\* 대출도서 무단 반출·고의적인 도서 분실·훼손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 등

**효과** '행정구역'이 아닌 '생활권역'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 가능

\* 서울시 도봉구·노원구 잠재수요 고객 8만명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



### ◆ **쉐어하우스 입주 가능한 청년 범위 확대** 네거티브 리스트

「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」



**기존** 세종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 자격이 '지역'과 '졸업 시기'를 기준으로 한정 열거

\* △세종시 관할 구역 외 출신으로 세종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자 △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 미만의 미취업자

→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자, 세종시 외 대학교 학생 등이 입주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

**개선**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에게 공동주택 입주 신청 허용 (공동주택 입주 자격 열거 조항 삭제)

**효과**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

\* 세종시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(36.7세) 도시, 19~39세 인구가 전체의 약 30%

## 3-2. **[공공 인프라]**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지역민 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(19건)

### ◆ **공원시설 관리 위탁 운영기관 확대** 네거티브 리스트

「의정부시 도시 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



**기존** 공원시설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독점 위탁하여 관리  
→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에 위탁운영 불가

**개선** 수탁자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(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 삭제)

**효과**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으로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내 물적·인적 인프라 활성화

### ◆ **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범위 확대** 유연한 분류체계

「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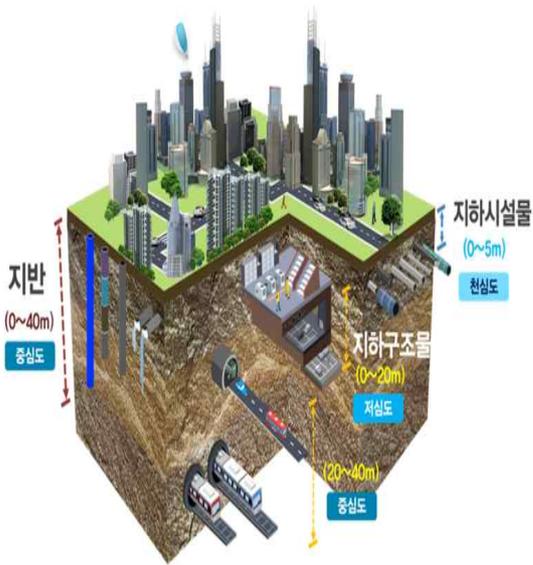
**기존**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하는 공동이용시설\* 종류가 3종으로 한정 \* 보안·방범시설, 복리시설(운동시설), 쓰레기처리시설 등 3종

→ 공동취사시설 및 공동육아공간 등 새로운 유형의 주민 편의시설의 신속한 확충 애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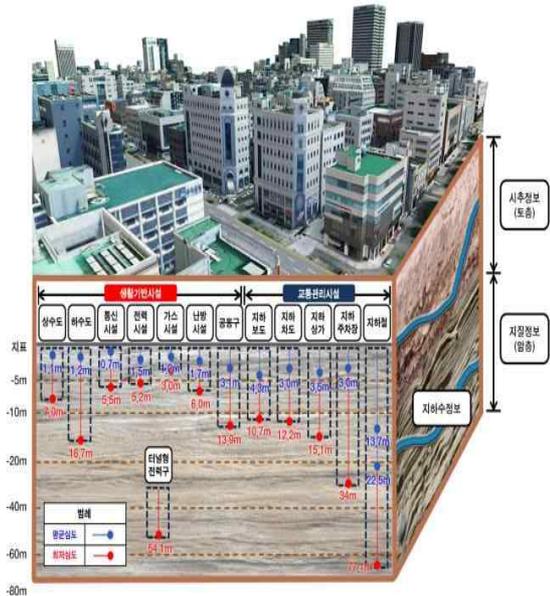
**개선** 새로운 유형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

**효과**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즉시 반영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

□ 지하공간정보의 공간적 범위 및 모식도



<지하공간정보의 공간적 범위>



<지하공간정보 모식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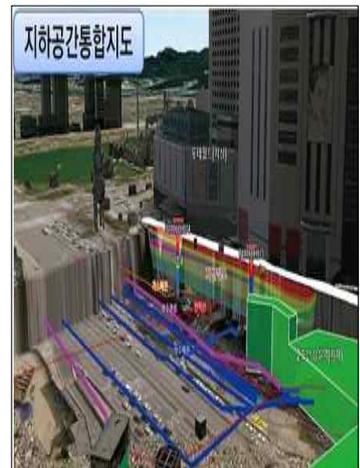
□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정



<상하수도 전산화(2D)>



<6대 지하시설물통합 DB(2D)>  
(상하수도, 가스, 열수송, 통신, 전력)



<지하공간통합지도(3D)>  
(시설물+구조물+지반)

<지하공간통합지도 반영정보>

지하시설물	지하공간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의미, 상·하수도, 가스, 열수송, 통신, 전력 등 <b>6종의 시설물정보</b>
지하구조물	지표면 아래 구축되는 구조물에 관한 정보를 의미, 지하철, 공동구, 지하상가·도로·보도·주차장 등 <b>6종의 구조물정보</b>
지반	지하지층(토층, 암층)에 관한 정보를 의미, 시추, 지질, 관정 등 <b>3종의 지반정보</b>

**비 전**

**지하안전사고 없는 스마트한 국토 실현**  
 - 삶의 영역을 넓히는 지하정보 미래기술 -



**목 표**

- 신뢰성있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
- 지하정보 활용기반 강화 및 종합적 도시정보 제공 확대

3대 추진전략	중점 추진과제
<b>지하공간 정보통합 구축·확대</b>	□ 지하공간정보구축사업 조기 완료, 확대 추진 ① 6대 지하시설물 통합 DB구축(상하수도 전산화 포함)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완료 ② 민간에서 관리하는 통신·전력구 등 정보 추가
<b>신뢰받는 지하공간정보</b>	□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 ① 지하공간 정보 정확성에 대한 유관기관 책임성 강화 ② 지하매설물 정확도 개선 시범사업 추진 ③ 측량·탐사관련 R&D 추진 및 표준·품질관리 ④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
<b>스마트한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</b>	□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정보의 활용성 제고 ① 지하정보 활용 대상사업 등 확대 ② 지하정보DB 제공절차 간소화 ③ 다양한 기관의 지하정보 연계·활용 지원